

2009년 12월 15일

**미국의 안전과 번영을 위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의 요약
(CIR ASAP: Comprehensive Immigration Reform
for America's Security and Prosperity Act of 2009)**

이 요약본은 CIR ASAP 법안의 핵심 조항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이에 관한 IPC의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향후 보완될 것이다.

I. 국경 안보, 구금, 단속

국경 안보: 법안은 국경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조항과 효과적인 이민단속을 수행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국토 안보부 장관은 국토 안보부가 이미 시행하고 있는 업무와 일치하고 21세기에 맞는 효과적이고 책임감 있는 단속에 관한 전망을 제시하는 국경안보를 위한 국가 전략을 공식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한다.
- 미국과 멕시코 국경 일대의 폭력과 범죄로부터 미국의 국경 도시와 커뮤니티를 보호하기 위해 연방, 주, 지방법 집행 관리로 구성된 남부지역 국경 안보 특별 위원회(Southern Border Security Task Force)를 설립한다.
- 인원과 자산의 증대에 앞서 정부가 인원과 자산의 현재 보유 목록을 만든다.
- 국경 감독관들에게 추가적인 교육, 관리, 평가를 제공하고, 이들이 충분한 장비와 기술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나 프로젝트를 알아내고 기반 시설 자원을 개선하며 국가 안보 위협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경을 건너는 상품과 사람에 대한 보다 효과적인 검열을 시행하기 위해 각 공항 및 항만의 기반 시설과 운영에 관한 연구를 의무화함으로써 공항과 항만을 현대화한다.
- 공항과 항만의 풀타임 감독관 및 농업 정책 전문가 인원 수를 증대시키고, 상품과 사람의 신속하고 안전한 교류를 향상시키기 위해 직원들을 지원한다.
- 국경 일대의 범죄 척결을 위해 주법집행 기관과의 협력을 증대시킨다.
- Operation Streamline 프로그램의 목표, 영향, 비용과 손익 분석에 관한 검토가 이루어 질 때까지 이 프로그램의 운영을 일시 중단한다.
- 효과적인 단속을 시행하기 위해 함께 모인 파트너와 협력기관으로써 국경 커뮤니티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단속 위원회와 국경 커뮤니티 연락사무소를 설립한다.
- 밀입국을 척결하기 위해 연방 및 주 지역 파트너들 간에 협력을 증진하는 계획을 개발하고 시행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하여, 밀입국과 입국 시도 중 발생하는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한 정책을 포함한다.

구금 환경 개선: 법안은 구금 환경 개선하고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사회적 소외 계층을 보호하는 많은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 국토 안보부는 구금인에 대한 인도적인 대우와 적절한 치료를 보장하고 전화 사용을 허가하며 성적 학대 및 기타 학대로부터 구금인을 보호하는 특정 의무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 규정 준수 여부를 조사하고 보고하기 위해 독립적인 이민 구금 위원회를 설립한다.
- 국토 안보부는 구금인 사망 시 48시간 내에 이를 보고하고 구금소 내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 사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매년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구금 프로그램을 대체할 안전한 프로그램을 증대한다.
- 피난민에 대한 불필요한 구금을 금지한다.
- 가족과 부모가 생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구금된 부모와 후견인, 보호자들에 대한 보호를 증대함으로써 함께하는 가족의 의미를 보호한다.

단속 활동 중 권리 보장: 법안은 정당한 재판받을 권리와 그 외 단속 활동 중 보장되어야 할 권리들이 침해받지 않도록 하는 여러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노동자들이 고용주에게 노동관련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노동자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다 고용주의 표적이 되어 구금당한 경우, 이들에게 임시 비자와 노동 허가를 제공한다. 또한 U 비자의 범위를 부정부패 고발자를 포함하는 것으로 확장한다.
- 287(g) 프로그램을 폐지하며, 오직 미 연방정부만이 연방 이민법을 집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고히 한다.
- 이민 관련 단속 과정 중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 그 외 합법 거주자, 사회적 소외 계층을 위한 심사 절차를 보완하고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 단속 과정 중 사회 봉사 단체의 활동, 통역, 법률 자문 제공을 보장하고 모든 구금 이민자들이 법률 교육을 받을 기회를 제공하도록 한다.
- 단속 활동 중 이민자가 법률 자문을 구할 수 있도록 권리를 보호하고 추방과정에 전적으로 참여할 수 없는 장애인 이민자가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이들의 권리를 보장한다.
- 국토 안보부는 이민과 관련 법집행 활동의 영향에 관해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
- 국토 안보부의 결정과 업무를 재검토하기 위해 해당 사법권 내 연방 법원의 권한을 복원한다.

II. 고용 확인

고용 허가 확인: 법안은 고용주가 노동자를 채용할 때 노동 허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고용 확인 시스템을 도입한다. 신규 시스템은 단계적으로 실행될 것이며, 최종적으로 모든 고용주와 신규 채용에 이 시스템을 사용할 것이다. 다음은 고용 확인 시스템의 내용이다.

- 신규 시스템 하에서 의무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고용주를 민사상 처벌하고 노동자가 고용 허가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고용한 경우 형사상 처벌할 것이다..
- 개인 정보 보호를 포함하며, 국민 신분증을 만드는 것을 금지한다.

- 차별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여 고용주들이 출신국가를 이유로 지원자나 노동자들을 차별하는 데 신규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을 금지한다. 또한 고용주가 일시적인 미확인 상태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고용 계약 전에 노동자를 선별하는 것에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 또는 선별적으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은 금지된다.
- 개인이 사회 보장국에 등록하여 비밀번호를 얻게 한다. 이로써 개인들은 인터넷으로 시스템 내의 본인 파일에 접근할 수 있고 본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으며 다른 사람이 이 파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설정할 수 있다.

III. 비자 개혁

가족과 취업 비자의 서류 적체 감소: 법안은 가족 초청 비자와 취업 이민 비자, 비이민 비자 발급 상의 서류 적체를 감소시키기 위한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 1992년부터 2008년까지 사용하지 않은 취업 비자와 가족 초청 비자의 수를 이후 년도에 “추가 할당”을 허가하며, 향후 사용하지 않은 비자 수는 다음 년도로 이월하도록 한다.
- 이민 비자의 연간 발급 제한 건수에서 직계 가족 초청을 제외하며 각 국가별 연간 비자 발급 건수를 늘린다.
- 비자 수의 여유가 생길 때까지 자격이 되는 노동자들이 노동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고용 기반 영주권 신청 자격을 준다.
- 과학, 기술, 기계, 수학 관련 학위를 미국에서 취득한 외국인과 기타 주요 분야의 대학원 졸업생들은 숙련 노동자 비자 수 제한에서 배제한다.
- 외국인 간호사들은 현재 비자 수 제한에서 제외하고, 국내 간호사의 공급을 금전적으로 지원하고 개발하며 다른 국내 의료관련 종사자를 위한 교육을 독려하기 위한 신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함께 사는 가족의 가치를 증진: 법안은 미국의 가정들이 생이별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정책들을 포함하고 있다.

- 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어린이들을 1차 초청 대상으로 재분류한다.
- 미국 시민권자 또는 영주권자 초청인이 가족의 영주권 신청 과정에 사망하여도 이들 가족의 초청 서류는 계속 진행되도록 한다.
- 가족 재결합을 위해 불법 체류와 같은 이민자들의 위법 행위를 처벌로부터 면제할 있는 재량권을 정부에 제공한다.
-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가 가족 초청 중 사망한 경우,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당되는 자격을 부여하여 이들의 미망인과 유자녀들을 구제한다.
- 영주권을 취득한 지 오래된 영주권자가 추방 명령의 취소를 요청하는 경우, 이민 재판관이 자격 요건을 심사함에 있어 더 많은 재량권을 부여하도록 한다.

- 박해에 대한 두려움으로 12살 이전에 본국에서부터 피난하여 미국에 가석방자 또는 피난민의 신분으로 입국 허가받았거나 망명자로 인정받은 사람들은 추방되지 않도록 규정하여 피난민, 가석방자, 망명자를 보호한다.
- 미국 시민권자 어린이의 부모가 추방 명령을 받은 경우, 이민 재판관이 부모의 추방이 해당 어린이를 위한 최선책이 아니라고 판단하면 이 추방 명령을 거부할 수 있도록 한다.
- 가족 초청 후원자의 재정보증 자격 기준을 연방빈곤수준 125%에서 100%로 줄이는 것으로 변경한다.

차후 불법 이민의 방지: 법안은 Prevent Unauthorized Migration Visa (무허가 이민 방지 비자 – 이하 PUM 비자) 제도를 도입하여 새롭게 구성된 노동 위원회 권고사항의 법제정까지 걸리는 3년 기간 동안 안전하고 인도적인 이민을 제공한다.

- 지난 5년 동안 미국내 불법 이민 인구가 전체 불법 이민의 5%인 이하인 국가 출신의 이민자들을 대상으로 3년 동안 매년 100,000개의 PUM 비자를 제공한다. 이는 추첨 방식을 통해 불법 이민 인구 퍼센트에 반비례하여 배분된다.
- 이민 서류 접수 시 미국에 거주하지 않았고 다른 가족 구성원이나 이민을 목적으로 한 고용기록이 없으며 전과 조사를 마치고 기록을 제출하고 2년제 이상 4년제 미만 학부 과정을 수료한 사람은 PUM 비자를 신청해 볼 수 있다.
-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조건부 거주자로 미국에 거주할 수 있고, 비자 취득 3년 후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다.

IV. 서류미비 이민자의 신분 합법화

신분 합법화: 법안은 자격이 되는 서류미비 이민자에 대한 신분 합법화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배우자, 자녀 포함)

- 자격이 되는 이민자들은 6년간 유효한 *조건부 비이민 비자*를 받는다. 이 비자를 통해 합법 신분을 부여받은 이민자들은 노동 허가과 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고 추방으로부터 보호받는다.
-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2009년 12월 15일 이전에 미국에 불법적으로 거주한 사실을 입증한다.
 - 노동, 교육, 군 복무, 기타 자원봉사 활동 또는 커뮤니티 서비스를 통해 미국에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한다. (미성년자, 장애인, 연장자, 특수 상황에 처한 자는 제외)
 - 신청 수수료와 500불의 벌금을 낸다.
 - 중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나 경범죄를 3번 이상 저지른 일이 없어야 한다.
- 추방 절차 중 이거나 추방 위기에 처해있거나 또는 자진 출국을 명령받은 이민자들도 신분 합법화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다.
- 허위 소셜 시큐리티 번호 사용과 같은 서류미비 신분과 관련된 모든 위법 행위는 처벌 면제될 것이다. (단, 안보과 범죄에 관련된 위법 행위는 제외)

영주권자로의 신분 조정: 자격이 있는 조건부 비이민자들과 그들의 배우자, 자녀들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시민권도 신청할 수 있다.

- 현재 이민 서류 적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법 제정일 이후 6년 이내에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영주권을 발급하지 않을 것이다.
- 조건부 비이민 비자에서 영주권을 신청한 이민자(부양가족 포함)들은 전세계적인 비자 발급 수 제한과 상관없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드림 법안: 16세 이전에 미국에 왔던 서류미비자는 앞서 설명한 프로그램을 통해 합법 신분을 취득할 수 있다.

- 자격이 되는 이민자는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 미국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년 동안 대학에 재학하거나 군복무를 하거나 고용되었던 사람들은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자격이 된다. 이 조항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은 영주권 취득일 1년 후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다.
- 각 주는 서류미비 학생에 대한 거주민 학비 혜택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농장 노동자: 2009 AgJOBS 법안은 CIR ASAP 법안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로써 노동허가가 없는 농장 노동자들이 신분을 합법화할 수 있고 H2-A 임시 농장 노동자 비자 프로그램이 개혁될 것이다.

V. 노동력 강화

이민 노동시장 위원회: 법안은 이민 노동시장 연방 위원회를 독립기관으로 편성한다.

- 위원회는 경제 성장, 경쟁력, 임금과 노동권 보호를 증진하는 고용기반 이민 정책을 개발한다.
- 위원회는 이민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방차원의 연구 의제를 설정하고 고용 관련 이민 자료를 분석하고 이를 출판한다. 또한 고용 기반 이민의 신규 범주 설정을 비롯해 향후 미국에 입국하는 노동자의 흐름과 관련하여 비자 수 제한과 절차 상의 특징에 관해 의회에 권고안을 제출한다.

안보와 번영 증진기금: 이 법안에 들어있는 프로그램들을 통해 발생하는 수수료와 벌금은 안보와 번영 증진기금으로 새롭게 편성될 것이다.

- 이 기금은 각 주별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을 돕는데 사용되고 전자 고용 확인 시스템과 이민 노동시장 위원회에 쓰이며, 미국 노동자들을 돕는 기금 프로그램을 만드는 데 쓰일 뿐만 아니라, 국경 안보, 구금, 단속 행정에도 쓰이며 비자 서류 적체 해소에도 쓰인다.

미국 노동자 모집 및 연결 시스템 (AWRMS): 각 주의 노동력 관리 기관 네트워크와 연계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검색이 가능하고 그동안 노동허가가 없는 노동자들에게 의존해 온 산업분야의 고용주들이 고용 기회를 게재할 수 있게 한다. 이 시스템은 고용주들을 웹사이트에 프로필을 올린 노동자들과 연결해 준다.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 개정안: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 모집 시 이들의 권리 보호에 힘쓰고 현재 임시 노동자 프로그램을 개정할 것이다.

- 고용주들은 노동부 장관을 대신해 활동하는 노동자 모집인의 신분을 확인하고 노동자 모집 시 일어날 수 있는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안내서를 전달하며 권리 침해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진다.
-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기 전에 미국 내 노동자 우선 모집할 수 있도록 모집 자격 요건을 완화하고 잠재적인 사기와 법집행의 오용을 조사하는 노동부의 권한을 확대하며, H-1B 프로그램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고용주들의 연례 회계 감사를 승인하고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를 높인다.
- L-1 비자 소지자를 감사하는 권한을 국토안보부에 준다. L-1 비자 프로그램 조항을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H-2B 비자 프로그램: 법안은 미국 노동자 모집 자격 요건을 보다 강화하고 지난 해에 대량 해고를 감행한 고용주들이 이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을 금지하며 노동자 권리 보호를 증진한다.

EB-5 투자자 비자:

- 영구적으로 EB-5 비자 프로그램을 재승인하고 비자 사용 건수를 10,000건으로 확대한다.
- 신청자는 신속한 서류 처리를 위해 2500불의 추가 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 특정 농촌 지역, 높은 실업률을 보이는 지역, 1970년 이래 20% 이상의 인구 감소를 보이는 카운티를 포함시키기 위해 현재 고용 증진 지구(Targeted Employment Area)의 범위를 확대한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새로운 전략을 연구하고 권고하는 권한을 국토안보부에 부여한다. 벤처 투자자 비자를 새롭게 구성한다.

VI. 새로운 아메리카의 통합

이민 수수료: 향후 수수료 인상 요청 시 상세한 검토를 거치고 시민권 취득을 보다 쉽게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시민권 취득 절차 개선과 사회 통합: 이민자 커뮤니티 내 시민으로서의 통합을 고무시킨다.

- 시민권 시험과 관련하여 동일한 행정을 펼친다.
- 영어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나이를 하향 조정하여 연장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증진한다.
- 배경 조사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이에 대한 효율성을 평가한다.
- 이민자들이 시민권 취득하는 것을 증진하고 돕기 위해 커뮤니티의 단체들을 위한 기금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 영어 교육 프로그램에 장려금을 지급한다.
- 이민자들의 시민권 취득을 기념하고 이들의 커뮤니티 통합을 독려한다.